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: 정부조직 개편 논란

- (내용 및 전망) 99년 1/4분기로 예정되어 있던 2차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각 부처 및 정치권의 이기주의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

- 새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1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2차 개편안이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되었음
- 그러나 여야간, 여당간, 그리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애초에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정책 기능의 중복과 그에 따른 정책 혼선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될 전망이다

- (대쪽 개편 견해)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기획예산위원회에 건의한 방안으로, 예산 기능 독립, 주요 부서 통합 등이 주요 내용임

-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기획예산부로 통합하여 독립시키고, 경제정책 조정 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부여함
- 산업자원부·정보통신부·과학기술부 및 노동부·보건복지부의 통합, 해양수산부의 폐지,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이 핵심 내용임

- (소쪽 개편 견해) 여당 내부와 각 부처가 주장하는 방안으로, 조직은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민간 경영 기법만을 도입함

- 대부분의 부처는 현행을 유지하되, 예산청을 재정경제부의 외청화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는 재고하도록 주장함
- 개방형 임용제 역시 내각책임제로의 개편을 고려하여 축소 도입을 주장함

<정부조직 개편 견해차의 주요 내용>

주요 사안	확대 개편 견해	축소 개편 견해
기획 및 예산 기능	-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으로 기획예산부 설치	- 예산청의 재경부 외청화 - 기획예산위원회의 폐지
주요 부처 통합	- 산업자원, 정보통신, 과학기술부 - 노동부, 보건복지부	- 현행 유지
중앙인사위원회 설치	-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	- 설치 반대

□ 정부 정책 동향 (3. 15~3. 21)

<p>기획예산위원회(3.15): 개방형 공직 절반은 민간인 의무 채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장급 이상 300~350개의 개방형 임용직 중 최소한 150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민간인을 임용 - 공무원은 퇴직 후 계약 형식으로 개방형에 임용
<p>산업자원부(3.16): 협력업체 Y2K 해결 지원 대기업에 세제 혜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 협력업체의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게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
<p>정보통신부(3.16): 단일 사업자가 위성방송 서비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, 언론사,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단일 컨소시엄이 99년말까지 위성방송 허가 절차를 마치고, 2000년 말 혹은 2001년 초부터 방송 시작
<p>금융감독위원회(3.17): 리스사도 워크아웃 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리스 등 리스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키로 함 - 일반 기업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중복되므로, 대주주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실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
<p>재정경제부(3.18): 관세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이징액 환급액 대상이 연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1,000 개의 수출업체가 추가 혜택 - 수탁 가공 수출, 위탁 가공 수출, 위탁 판매 수출 등을 하는 업체도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
<p>재정경제부(3.19):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의 만기 1년 미만의 해외 차입 혹은 해외증권 발행을 허가제로 전환하고, 가변예치의 무제도(VDR)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-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 시행
<p>한·일 양국(3.20): 경제협력 의제 21 채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·일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 강화에 필수적인 각종 규제 및 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제를 채택 - 투자협정, 이중과세방지협약, 표준 분야 협력,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, WTO 차기 협상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
<p>재정경제부(3.21):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월부터 기존의 '여신' 개념을 '신용 공여'로 확대하여 회사채, 기업어음(CP) 등도 여신관리 대상에 포함 - 동일인 여신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범위도 후순위채, 대손충당금 등 보완 자본을 포함한 자본으로 확대
<p>재정경제부(3.21):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권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자본금을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는 1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, 투자자문회사는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 - 또한 투자일임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
(과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